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지리교육계의 대응 중간 점검과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의 시사점

박종희*

Interim Inspection of the Geography Education Community's Response to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nd Implications for the Launch of the National Board of Education

Jonghee Park*

요약 :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사항 시안 발표(2021년 11월 24일)에 의하면 고등학교 지리 선택과목들의 탄생은 유의미하다. 지리교사네트워크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진, 그리고 대한지리학회와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등 학계가 미래지리교육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연대하여 하나처럼 대응한 것은 가장 뜻깊은 발자취이다. 그 결과 고교 선택과목에서 세계시민과 지리, 한국지리 탐구, 도시의 미래 탐구, 여행지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교육과정 편제 기준표 표기와 중학 사회 분리·분책 및 교과서 기명은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이루어야 할 목표 지점들로 남아 있다. 대수능 평가 문항 개선이 없다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완전히 적용되는 2027학년도까지 고교 지리 수업은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불어, 2022년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의 '권력의 교육과정'에서 '정치의 교육과정'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지리교육의 과제를 청산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관한 관심과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과정에 대한 발언권을 확산시켜나가기 위하여 지리인들이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고민하고자 한다.

주요어 : 지리교육, 지리교사네트워크, 미래지리교육발전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2022 개정 교육과정

Abstract :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of the draft of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November 24, 2021), the direction of the birth of high school geography elective courses is significant. It is the most meaningful step that academia, including the Geography Teachers Network, researchers at the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Evaluation, and the Korea Geography and Environmental Education Association, responded in solidarity with the Future Geography Education Development Committee. As a result, A global citizens and geography, Exploration of Korean geography, Exploration of the future of cities, Travel geography, Climate change and a sustainable world were created in the high school elective subjects. However, the designation of the curriculum organization standard tabl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rganization table") and the separation and division of middle school society and the marking of textbooks remain as target points to be achieved continuously. If there is no improvement in the questions for evaluating college entrance examinations, high school geography classes are feared to disappear until 2027, when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is fully applied. In addition, the launch of the National Board of Education in July 2022 means a change from the 'curriculum of power' to the 'curriculum of politics'. It is time to pay attention and recognize the launch of the National Board of Education in order to clear the task of geographic education. In order to spread the right to speak about the curriculum, I would like to think about what geographers should have.

Key Words : Geography education, Geography teachers network, Future geography education development committee, National board of education,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회덕중학교 교사(Teacher, Hoedeok Middle School, fainding@korea.kr)

I. 노력과 과제

1. ‘연대의 힘’,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시안)까지의 노력

미래지리교육발전위원회(이하 미지위)를 선도적으로 이끌어온 정성훈(2021)은 ‘지리교육에 대한 견해 차이로 갈등이 있었음에도 지리학자·지리교사 단체 14개가 연합하여 미지위가 발족한 것은 하나가 되어 난국을 돌파 하자는 것’이었다고 그 의의를 밝혔다.

2022 개정 역량 함양을 위한 사회 교과군 교육과정 지리 영역 연구진이었던 김혜숙 등(2021)은 ‘조금씩 목표가 다른 여러 지리학회와 단체가 지금처럼 하나로 뭉쳐서 협력하였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라고 돌아보았다.

전국지리교사모임과 전국지리교사연합회, 그 외 16개 지리교사 단체가 연합하여 구성된 지리교사 네트워크를

주도해온 윤신원(2021)은 ‘이번처럼 다수가 네트워크로 모여 가르칠 지리 과목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처음이었다’라고 회고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발표 시 고교 사회과 선택과목의 영역별 균형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리(5개), 역사(3개), 일반사회(7개), 도덕(4개)으로 제시되었다. 고등학교 사회과 선택과목 중 지리교육이 담당하거나 연계성 높은 과목들의 비중이 적지 않은 것을 표 1에서 볼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시안) 발표까지 과정에서 학회·연구진·교사가 함께 만든 고교 선택과목들은 고교분투하던 지리인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즉, 지리학계의 여러 단체, 평가원의 연구진과 전국의 지리교사 단체들이 연대한 것이 가장 큰 성과이며,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 선택과목에 대하여 5개의 과목을 제시하도록 이바지한 것이 그다음이라고 할

표 1.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시안)의 고등학교 교과목 구성

교과(군)	공통 과목	선택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사회 (역사/ 도덕포함)	한국사1,2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 현대사회와 윤리	한국지리 탐구, 도시의 미래 탐구 동아시아사 주제 탐구 정치, 경제, 법과 사회 윤리와 사상, 인문학과 윤리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통합사회1,2		국제 관계의 이해	

출처 : 교육부, 2021c.

표 2.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체제

	구성	기능
개정추진위원회	교육과정 전문가, 미래학자, 공간 전문가 및 교육부, 국가 교육회의, 시도교육감협의회, 연구기관 등	교육과정 연구개발, 교육과정 쟁점 및 운영 사항 논의, 개정안 마련
교육과정심의회	차관, 운영위원회, 학교급·교과별 위원회, 전문위원, 특별위원회, 참여위원회(지역, 학생), 29개 위원회 696명	교육과정 제정·개정 관련 사항 심의 및 조사·연구
각론조정위원회	인문, AI전문가, 교원 및 시민단체, 개정추진위원회 대표	총론 각론 연계 방안 및 교과별 내용 중복 해소, 학습량 적정화, 교과 이기주의의 견제
정책자문위원회	학계, 연구기관, 학회, 발달심리, 교·사대 협의회 등 범사회적 전문가	교육과정 미래 개선 방향 및 현안 자문 및 정책 대안 제시
현장의견수렴체제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회의
교육과정포럼, 심의위원회, 개정추진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각론조정위원회, 정책토론회(국회 등)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 지역·교과·학교 급별 교사 조직/현장 의견 수렴 제안, 지역교육과정 구체화 주체	교육과정소위원회(중장기 교육과정 개발 방향 모색), 국민참여단(국민, 청년 자문단)

출처 : 교육부(2021f) 중 '1.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발 체제' 도식을 표로 편집함.

수 있다.

교육부가 2021년 11월 24일 발표한 2022 총론 주요 사항(시안)의 고등학교 교과목 구성(안)은 타 교과 영역의 입장 표명이 이어지고 있어 고교 선택과목에 향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체제의 각 조직과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 국가교육회의 등 유관 기구 및 단체의 활동과 참여를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로, 시도교육감협의회 현장 네트워크는 전국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계속 모집하여 확대하고 있다.

여전히 교육과정 편제표¹⁾(이하 편제표) 상 지리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중학교는 ‘사회(역사 포함)/도덕’, 고등학교는 ‘사회(역사/도덕 포함)’로 체계성이 없다. 이에 대하여 미지위를 중심으로 ‘사회(지리, 역사, 일반사회, 도덕)’로 사회 4과를 모두 표기하도록 제안하였

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김혜숙 등, 2022).

2. ‘편제표’, 정부부처와 언론

총론 시안 발표를 앞두고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들을 정리한 문서인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의견 수렴 자료(교육부, 2021b)’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보도 자료(교육부, 2021a)’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 중에서 특히 2022 총론 시안에 반영도가 높았던 부분이 표 3의 목차 중 ‘6.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범부처 의견’이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이 문서의 ‘6.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범부처 의견’에 포함된 표 4의 법무부와 금융·기재부의 의견 제안이 표 1에서처럼 고교 선택과목에 ‘법과 사회’, ‘금융과 경제생활’로 과목명이 거의 같게 반

표 3.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의견 수렴 자료

목 차	
1. 국가교육회의 권고문	1
2.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 제안서	16
3. 국가교육과정 현장소통포럼	33
4. 2021 권역별 핵심교원 현장 지원	35
5. 학생·학부모 공감&소통 콘서트 권역별 의견	31
6.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범부처 의견	38
7. 총론 주요 사항 마련을 위한 공청회 의견	41

출처 : 교육부, 2021b.

표 4.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범부처 의견

<p>② 과목명 변경 및 개설 (법무부) ‘법과 사회’ 과목 및 진로·융합 선택에 다양한 과목 신설 등 (금융위) 과목명 변경(경제 → 경제생활), 금융교과 신설(금융기초) 등 (기재부) 과목명 변경(경제 → 경제생활, 실용경제 → 금융생활), 내용 개편 등 (과기부) 과학공통 개설 등</p> <p>③ 교과목 편제 및 교육과정 연계 (과기부) 과학을 기초교과로 이동, 정보의 독립 교과, 유초 과학 내용 연계 등 ☞ 교과 영역, 교과 편제 등은 지속 논의 중으로 부처 의견을 포함해 정책연구진 논의 및 개정추진위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할 사항임 ☞ 부처에서 요구한 교육과정 연계 강화 제안은 차기 초·중·고 및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진에 의견 전달 및 논의 예정</p> <p>④ 과목 시수 및 내용 영역 (과기부) 수학 시수 확대 및 학습 내용(행렬 등) 반영, 과학 필수시수 학점 확대 등 (통일부) 남북교류 내용 확대 등 / (금융위) 금융 내용 확대 보장 등</p> <p>□ 기타 의견 (과기부) 1교 1정보 교사, 무선망 확대, 연구팀 과학교육 전문가 필수 참여 등</p>
--

출처 : 교육부, 2021b.

표 5. 중학교 시간 배당 기준(안)

구 분		1~3학년
교과 (군)	국어	442
	사회(역사 포함)/도덕	510
	수학	374
	과학/기술·가정·정보	680
	체육	272
	예술(음악/미술)	272
	영어	340
	선택	170
창의적 체험활동		306
총 수업 시간 수		3,366

출처 : 교육부, 2021c.

표 6. 고등학교 학점 배당 기준(안)

교과(군)	공통과목(학점)	필수이수학점
국어	공통국어(8)	8
수학	공통수학(8)	8
영어	공통영어(8)	8
사회(역사/도덕 포함)	한국사(6)	6
	통합사회(8)	8
과학	통합과학(8) 과학탐구실험(2)	10
체육		10
예술(음악/미술)		10
기술·가정·정보/제2외국어/한문/교양		16
소계		84
자율이수학점		90
창의적 체험활동		18(288시간)
총 이수 단위		192

출처 : 교육부, 2021c.

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의견이 표 4와 같이 교육과정에 대한 범부처 의견에 가장 빈도 높게 등장하였고, 이것은 표 6에서 보듯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고교 편제표에 '정보'가 표기되는 것과 관련 있다. '정보'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는 중학 편제표에만 표기되어 있었다. 그러나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는 고교 편제표에도 반영되었다. 물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화두와 사회적 요구도 영향을 미쳤지만,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연계의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에 관

련 부처의 의견 중 교과 영역과 편제에 대한 것을 지속해서 논의하고 정책연구진·개정추진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겠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겨 놓고 있다.

그동안 사회과 및 총론에 대한 실시간 온라인(Youtube, Zoom) 공청회 시 다수의 지리교육자들이 참여하여 개진한 의견들은 표 3의 7. 총론 주요 사항 마련을 위한 공청회 의견에 아래 표 7처럼 담겨있다. 주된 의견은 중학교 사회 분리, 편제표 상 지리 반영, 고교 선택과목 수 균형, 중학교 시수 균형 요구였다. 중등 사회과 교육의 불균형, 특히 편제표와 중학교 교과서 명칭에 지리가 부

표 7. 총론 주요 사항 마련을 위한 공청회 의견

<p>① 총론 주요 사항 마련을 위한 연구 공청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학교 지리 교과 명칭 사용 및 분책 요구합니다. 교육과정 편제표 상에 '지리'만 빠진 점 개선 교과(군) 기술가정과 정보를 묶는 근거는 필요? 기술가정 분리 필요/지리 필요 중학교 지리 교과 명칭 사용 및 분책 요구합니다. 교육과정 편제표 상에 '지리'만 누락된 점 개선 사회(역사/도덕 포함)과에서 '지리'를 분리하여 분명히 영역을 표시하여 주세요.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지리·일사 분책을 통해 이 부분이 맥락 있게 가르쳐지도록 해주시기를 바랍 총론 편제표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사회 교과군이 '사회(지리/역사/일반사회/도덕)'로 표기 지리, 역사, 일반사회, 도덕윤리의 4개 교과군에서 균형 있게 선택과목 개발 <p>② 역량함양 사회과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학교 사회를 지리, 일반사회로 분리 중학교, 고등학교 편제명을 사회(지리, 역사, 일반사회, 도덕)으로 변경 제안 중학교 사회 1,2 교과서를 사회1은 지리, 사회2는 일반사회로 분책 요청 상징금지 지침으로 전공자가 지리, 일반사회를 나누어 가르치게 하자는 의견 중학교에서 역사 170, 도덕 170 시수와 비교해 사회(일사 85, 지리 85)로 절반 수준

출처 : 교육부, 2021b.

표 8.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보도 자료

순	영역	주요 내용	보도일시	쪽수
1	경제 교육	교사 80%, "경제 수업에 어려움" 절반 이상이 교과 진도 안 마쳐	조선일보(21.10.5.)	1
2		밀려나는 경제 교육 수능서도 퇴출 위기	매일경제(21.10.12.)	2
3		어렵고 편향적, 경제교육 총체적 난국	매일경제(21.10.12.)	3
4		이론 대신 용돈 투자법부터...자전거 타기처럼 가르쳐야	매일경제(21.10.12.)	4
5		경제 필수과목 정해도 모자랄 판에 수능서 퇴출 위기라니	매일경제(21.10.13.)	5
6		2028학년 수능 선택과목서 경제 정치 빠지나	서울경제(21.10.28.)	6
7		공유경제와 공유수업	매일경제(21.11.1.)	7
8	한국사 교육	교육부, 고교 한국사 수업 축소 논의, 교육계 "현대사 제대로 못 배워"반발	한겨레(21.10.27.)	8
9		아이들이 역사에 관심갖기 시작했는데...교육부, 찬물 끼었나	오마이뉴스(21.10.29.)	9
10		역사교육 살려야, 선택과목 불균등 교육과정 개정 논쟁 가열	연합뉴스(21.10.30.)	10
11	정보 교과	정보 교과(AI SW) 관련 언론보도(21.4.~10.)		14~21

출처 : 교육부, 2021a.

재한 현실에 대한 시정 요청이 주로 많았다.

표 8과 같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언론 보도 자료집 중 특히 '경제' 7건(7쪽 분량), '한국사' 3건(6쪽 분량), '정보' 33건(8쪽 분량)의 기사가 정리되어 있는데, 모두 2022 개정 총론 시안과 관련성이 높다. 진로 선택 과목 '경제'와 융합 선택과목 '금융과 경제생활'처럼 고교 선택과목 중 2개의 경제 과목이 생성되었고, 한국사의 학점을 6단위 → 5단위로 감축하려 했던 것이 저지되었다. 정보에 관한 언론 기사는 너무 많아 경제나 한국사의 기사가 전면이 실린 것과는 달리 요약된 33건 기사를 스크랩했는데, 편제표 기명과 시수에 큰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2022 개정 총론 시안과 교육부 문건을 분석 하였을 때, 이미 학계에서 논의되어왔던 사실을 재확인 할 수 있다. '유관 정부 기관과의 소통과 협력', '지속적인 언론 보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3. '중학교 지리', 교과서명 부재와 시수 불균형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현재 중학교 사회과 는 도덕, 역사, 사회 세 과목, 교과서는 '도덕1,2', '역사

표 9. 현행(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과 운영

영역	도덕	역사	지리	일반사회
과목명	도덕	역사	사회	
교과서	도덕1, 도덕2	역사1: 세계사, 역사2: 한국사	사회1: 대단원 지리6+일반사회6 사회2: 대단원 일반사회6+지리6	
시수	170	170	170	
시수 비율	1	1	0.5	0.5

표 10. 중학 사회 교과서 분책 민원에 대한 교육부 답변

'제안 주신 내용이 중학교 사회 교과 같은 책 안에서 분권하는 것이라면, 외형체제 변화에 해당하여 교과서 발행사에 따라 한 권 내에 두 영역을 분권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중학교 사회 교과서를 각각 지리와 일반사회 교과서 분책하는 것은 교과서 구분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차기 교육과정에서 정해지는 것과 연계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1,2', '사회1,2'로, 시수는 도덕(170시간), 역사(170시간), 사회(170시간)로 운영되고 있다. 지리와 일반사회 영역은 '사회' 과목으로 통합, 교과서는 '사회1,2'로 물리적으로 접합되어 있다. 사회1은 지리 6개 일반사회 6개, 사회2는 일반사회 6개-지리 6개 대단원 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도덕:역사:지리:일반사회의 시수 비율은 1:1:0.5:0.5이다. 중학 사회과는 도덕과 역사는 분리되어 있지만, 지리와 일반사회만 통합되어있는 불완전한 체제이며, 시수의 불균등 문제도 갈등의 씨앗으로 남아 있다.

중학교 지리는 편제표는커녕 교과서에도 이름이 없다. 현장에서 학생들은 지리와 공간 단원을 배우면서 '사회'로 인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리 전공 교사는 타자, 특히 학습자들이 '사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규정하기 때문에 정체성의 혼돈을 겪는다. 지리 내용을 가르치면서도 '사회 선생님이 가르치는 사회 수업 내용'이 되기 때문이다.

류재명·서태열(1997:5)은 24년 전 7차 교육과정 개정 당시 비전공 교사의 지리 수업과 명칭의 부재가 결국 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공간적 문제의 인식을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학습자들의 사고 체계가 왜곡되고 있다.

지리 단원 내용을 학습하면서 지리라고 알지 못하는 것은 결국 공간에 대한 본질적 사고를 약화시키고 땅을 사회·정치·경제적 수단과 도구로 인식하는 사고관을 양산하고 있다. 거주지(주택, 부동산) 문제, 국토 불균형, 세계 문제 같은 공간적 주제에 관한 탐구를 하는 과목이 중학교에 존재하는가. 공간적 문제의 해법 부재가 얼마

나 큰 국가적 세계적 이슈인지 목도하고 있다.

중학교 교과목 명칭이 사회이므로 결원이 생길 때 일반사회를 전공한 교사로 인식하여 실제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타 교과 전공자들의 영향력 행사와 비교해 지리 전공자들은 정당한 몫을 빼앗기고 있다. 이로 인하여 현장에서 일반사회 등 비전공 교사가 지리 영역을 나열식으로 가르치게 되어 학생들은 지리적 안목을 함양하지 못하고 있다(류재명·서태열, 1997:5).

교육부는 2022 총론(시안) 발표를 기점으로 '각론'에 해당하는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중학교 사회를 분책해야 합니다.'라는 민원 요지에 대하여 교육부 당국은 표 10과 같이 답변하였다.

사회1과 사회2 교과서의 현행(2015) 단원 구성을 유지한 채로 별도로 분권을 하는 것은 발행사(출판사) 별 자유로운 사항이라는 것이다. 또한, 별도로 사회1은 지리 내용만, 사회2는 일반사회 내용만으로 분책하려면 '교과용 도서 구분 고시'에 담기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추가 설명하고 있다. 교육부 답변을 참고하여 중학교 논의에 혼동을 줄이고자 분리, 분책, 분권 각각의 사례(안)을 표 11처럼 구상해 보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편제표가 담겨 발표되고 시안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분리(안)은 어려움이 크다. 선행연구(류재명·서태열, 1997)와 현행 교육과정 연구진의 언급에 의하면 현실성이 가장 높은 것은 분책(안)이다. 분책도 어렵다면 분권(안)이 있는데, 이는 발행사들이 교과용 도서 구분 고시와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이번 대응에서 중학교 사회를 지리와 일반사회로 과

표 11. 중학 사회 분리/분책/분권의 이해

분리(안) - 국가교육과정 총론의 편제표 개정 필요

과목	지리		일반사회	
	지리1	지리2	일반사회1	일반사회2
내용	국토(한국)	세계	사회문화, 정치	법, 경제

분책(안) - 교과용 도서 구분 고시 개정 필요

책	사회1	사회2
내용	지리	일반사회

분권(안) - 교과서 발행사 결정

책	사회1		사회2	
권	사회 1-1	사회 1-2	사회 2-1	사회 2-2
내용	국토(한국)	사회문화, 정치	법, 경제	세계

* 교육부 답변(표 10)과 교육과정 연구원의 자문을 통하여 구안함.

표 12. 중학 사회과 및 과학 과목 성취기준 수

중학교				
도덕	역사	사회		과학
		지리	일반사회	
23(4)	45(12)	38(13)	36(13)	92(24)
		74(26)		
		142(42)		92(24)

출처 : 학생평가지원포털.

* () 안 숫자는 영역(단원) 수.

목 분리하고 분책하며 편제표에 기명하는 것은 이루어 내지 못하였으나, 각론 개발과 교과용 도서 구분 고시까지 지리인이 합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김혜숙 등, 2021). 교과서 분책·분권의 논거와 구체적인 교과서 명칭 등에 대하여도 내부적 의견을 결정해야 한다.

표 12처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사회 성취기준(단원) 수는 지리 38(13)개, 일반사회 36(13)개로 대등하다. 이 사실은 교육과정 각론을 열어보지 않고는 교육청 인사 담당자들이 모를 수 밖에 없다. 국가교육과정 문서상 중학교 사회의 '지리와 일반사회 비중이 동등하다.'는 문장이나 안내는 없다. 이로 인하여 중학 지리 TO의 결원이나 신규 수요가 발생할 때도 지리 영역 명과 비중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일반사회과 TO로 산정하는 오류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과목 분리를 위하여 성취기준 수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사회과 타 과목보다 너무 많은 성취기준 수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중심 수업과 새로운 수업 방법

의 연구·개발·적용을 어렵게 하는 '양날의 칼'과 같은 측면도 있다.

실제로, 중학교 사회과 영역별 시수와 성취기준 수를 정리해보면, 도덕은 성취기준 1개를 수업하는 데 7.4시간을 부여받고 있어 교사와 학생의 수업·수행 부담이 훨씬 적다. 이에 비하여 지리는 2.2시간 만에 성취기준 1개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교사와 학생의 교과 진도 부담이 도덕보다 3배 이상인 셈이다. 수업 시수가 가장 부족한 영역은 지리와 일반사회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일반사회 영역과 함께, 중학 도덕 역사 시수 균형에 대하여 소통하고 조정해 나가야 한다.

지리 기본 개념을 학습하는 과정을 통하여 지리적 개념을 학습자가 갖추게 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김다원, 2017). 더불어 중학교에서 지리 전공 교사들이 학습 내용을 '지리'라고 학생들에게 각성시켜야 하지만 ①시간표와 교과서에 '사회'라고 되어 있고, ②학생과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사회 선생님'이라고 호명되며, ③

표 13. 현행(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과 운영

	도덕	역사	지리	일반사회
과목명	도덕	역사	사회	
시수	170	170	85	85
성취기준 수	23	45	38	36
성취기준 1개당 시수	7.4	3.8	2.2	2.4

출처 : 표 9의 시수와 표 12의 성취기준수를 기초로 편집함.

사회적으로 사회보다 지명도가 낮고, ④교과 지도보다 생활지도나 업무가 상대적으로 중시되는 환경 등에 둘러싸여, 중학 지리교사들은 그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있다.

중학교 교과서명에 지리 영역을 명시하는 것은 임용 왜곡뿐 아니라, 학생 선택에 기반한 고교 학점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 중학교 사회를 분리하고 분책하는 것에 대하여 연구진과 교사 단체를 중심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전 전국사회교사모임 대표 교사와의 대화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하지만, 7차 교육과정 이후 지리-일반사회 연구진 간의 합의는 교육부 실권자에 의하여 지켜지지 않았다.

제7차 중등 사회과 교육과정은 연구개발자의 아이디어는 거의 삭제되고, 외부의 몇몇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압력에 따라 아무런 정당한 절차 없이 여러 번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책임의 소재가 매우 불분명하게 되어 버렸다(류재명·서태열, 1997).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 대한 결정은 교육부의 자의적 판단에 위임되었고, 여론이 수렴·집약되는 과정은 미약하고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였으며 최종 결정은 교육부의 판단에 따랐다.

예로 제7차 교육과정 개정 당시 제6차 통합 방식에 대한 반대가 88.0%였음에도 교육부 조정안은 부분적으로 수정한 정도이었다(박선미, 2005). 중학교에서 학년별로 한 영역을 배치한다는 공청회 안과 연구진 간 협의안은 교육부의 직접적인 개입의 강화로 조정되었다(이혁규, 2001). 즉, 희망적으로만 중학교 분책이나 분권을 좌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중학교 지리 단원 구성을 지역적 아니면 계통적으로 할지, 한 학년에 배치할지 현행 2015처럼 구성할지도 중요한 논의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지리, 국토, 세계, 공간' 등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이름을 교과서 표지에 반영하는 것에 집중하여야 한다. 아니면, 한 권의 사회책이라도 지리 단원들로만 구성하여 지리 전공 교사가 해당 내용을 담당하여 가르치도록 세밀한 계획

과 실천 의지를 모아야 한다.

중학교에서 지리 전공 교사가 '지리 교과서'를 가르칠 때, '지리 선생님'이라고 불리며 타자의 인정과 교사 자신의 전공 정체성의 일치가 발생한다. 중학교에 따라 비전공 교사가 지리를 가르치더라도 학습자는 배우는 내용이 지리와 공간 교육이라는 것을 인지라도 할 수 있다.

4. '대입 수능 고사' 선택자 비율

참고로 2013학년도 대수능에서는 한국지리가 사회문화에 이어 2번째로 응시자가 많은 과목이었다. 표 14처럼 생활과 윤리는 수능시험에 처음 도입된 2014학년도(2013년 11월 시행)에 사회탐구 내 응시자 수가 2위로 도약하였다. 하지만, 사회탐구 응시자 대비 과목별 선택자 비율을 보면, 2021·2022학년도 1위 과목인 생활과 윤리를 위시한 윤리과가 74.3%, 일반사회과가 70.2%, 지리 과목의 합이 32.3%로 극심한 차이를 보인다.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가 수능 필수과목이 된 이후 역사과의 사회탐구 응시자 수 대비 비율은 200%를 상회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 선택과목에만 기대하고 있을 수 없다. 정작 고교 전체 학년에 완전히 적용되는 2027학년도까지 5개 학년도 동안 고교 지리 수업의 선택률은 급감할 것이며, 결국 대학과 학교 지리의 쇠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이에 대하여 현장 교사와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지리 교과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

5. '더 큰 연대', 사회과 교육자 간 소통

지리의 '편제표 상 미표기, 중학 교과서명 부재, 중학 시수 불균형' 등 지금까지 논의를 통하여 읽을 수 있는 핵심은 '반쪽짜리 일방적 통합, '불균형으로 인한 불신과 갈등'이다. 실시간 원격으로 진행된 '사회교과군 교육과

표 14.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수, 비율

	2014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사탐 응시자 전원: 337,134명			*사탐 응시자 전원: 218,154명			*사탐 응시자: 226,442명*			
	응시자 수(명)	사탐 응시자 대비 비율(%)		응시자 수(명)	사탐 응시자 대비 비율(%)		응시자 수(명)	사탐 응시자 대비 비율(%)		
윤리	생활과 윤리	137,054	40.7	61.8	129,937	59.6	72.9	136,793	60.4	74.3
	윤리와 사상	71,114	21.1		29,063	13.3		31,399	13.9	
역사	한국사	42,529	12.6	32.1	421,034	193.0	212.9	448,138	197.9	215.9
	동아시아사	36,982	11.0		24,423	11.2		23,053	10.2	
	세계사	28,772	8.5		19,055	8.7		17,552	7.8	
지리	한국 지리	112,459	33.4	44.6	44,832	20.6	36.7	41,893	18.5	32.3
	세계 지리	37,684	11.2		35,186	16.1		31,221	13.8	
일반 사회	법과 정치	38,203	11.3	61.3	23,382	10.7	70.2	26,007	11.5	70.2
	경제	13,420	4.0		5,076	2.3		5,495	2.4	
	사회·문화	155,249	46.0		124,711	57.2		127,482	56.3	
사탐 1개 응시자		802명 (0.2%)		643명 (0.3%)		1,029명 (0.5%)				
사탐 2개 응시자		336,332명 (99.8%)		217,511명 (99.7%)		214,453명 (99.5%)				
기타		2014학년도 수능부터 탐구 선택 최대 2개				사탐+과탐 조합 10,960명				

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 2021,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채점결과 보도자료.

* 2014, 2021학년도에는 사탐 1개와 2개 응시자를 합한 값, 2022학년도에는 사탐·과탐 조합 응시자까지 합산한 값.

** 한국사는 2017학년도 수능부터 응시자 전원 필수 응시 과목으로 지정됨.

*** 사탐 응시자 대비 비율의 합이 100% 단위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1개 응시자, 2022학년도부터는 사과탐 조합 응시자 값 때문.

정 재구조화 연구 공청회(2021년 10월 8일)’는 사회과 4개 영역 각각의 요구와 그에 대응하는 갈등이 댓글로 표출되었고, 상대 영역에 대한 공격적 쟁론이 이어졌다. 사회과 교육과정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시정하려는 정책적 실천이나 과학과와 유사한 정도의 균형이 있었다면, 사회과 영역 간 극한 갈등이 계속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박철웅(2012)은 국가교육과정 개정에서 ‘과학과처럼 4분법 체제’, ‘사회과 분리’, ‘도덕과 일반사회는 사회과 혹은 공민과/ 지리와 역사는 지리역사과’ 등 안을 고려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사회과 교육의 자발적 통합과 학제적 상호 교류와 융합을 지원해야 할 교육과정 당국이 균형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도리어 불균형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재단 사처럼 행세하였다. 여론 변동과 외부 권력에 의하여 사회과 교육이 이용당하고, 멀리 보는 교육이 아니라 근시안적인 굴곡진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현장에 적용된 것부터 바로잡는 시도가 논의되는 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과 교육자들 간의 소통과 더 큰 연대, 그리고 과거의 누적된 갈등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공식

적 소통의 공간으로 사회과 교육자들이 참여를 넓혀야 한다.

II. 국가교육위원회

2022 개정 교육과정 각론 논의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둔 현재 시점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국가교육위원회법)’과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2022.1.11.)’를 분석하여 그 시사점과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설립 배경과 과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20일 제정되었고, 이는 2022년 7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각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2002년 이회창 대선 후보를 시작으로 2007년 정동영 후보, 2012년 문재인

표 15. 국가교육위원회법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5명), 국회(9명), 교원관련단체(2명), 대교협(1명), 전문대교협(1명), 시·도지사협의회(1명) 지명·추천한 사람과 교육부차관, 시·도교육감대표 등 총 21명으로 구성(제3조) • ①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②국가교육과정 수립·고시, ③교육정책 국민 의견 수렴·조정 등 업무(제10조~제13조) • 산하 자문기구로 국민참여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음(제16조~제18조)
--

출처 : 교육부, 2022.

인·박근혜 후보, 2017년 문재인·홍준표·안철수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였을 만큼 공감대를 오랜 기간 가져온 필요성(권혜정·홍후조, 2021)이 법안으로 수립된 것이다.

또한 제20대(2016-2020) 국회와 제21대(2020-2024) 국회에서 국회교육위원회 관련 법률안은 총 10개에 달하였다. 그동안 제출된 10개의 법률안을 비교하였을 때, 국가교육위원회의 성격에 대하여 6개가 초정권적 독립기구로 제안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 기반 위원회로 제정되었고, 그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5년마다 바뀌는 대통령제 아래에서 변동성이 컸던 교육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부가 교육 현안 문제 대응과 행정의 신속성에 쫓겨 중장기적 교육 정책 수립이 어려웠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그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안정성·일관성·지속성·전문성·중립성을 그 목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교육과정 결정 과정이 교육부 내 관료에 의하여 좌지우지되었던 권력적 과정에 대한 불신과 비판은 임계점에 도달하였다. 이제 학교 현장과 국민의 여론에 의한 정치적 결정 과정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가 ‘교육부의 독점적’ 권력의 교육과정’이었다면,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은 ‘(사회적 여론에 의한) 정치의 교육과정’으로 바뀌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구성 및 운영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은 21명으로 다음과 같다. 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지명 5명, 교육부 차관, 교육감협의체 대표, 교원 단체 추천 2명, 대학협의회 추천 2명,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이라는 구성이다. 교육부 차관과 교육감협의체 대표 각 1명을 제외하면, 19명이 추천을 받는 위원들이다.

안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와 대통령 추천 위원을 합하

여 14명인 것을 보아도 국민의 선거 참여로 선발된 행정부와 입법부 집권 세력의 정치적 견해가 교육과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교육과정 고시를 결정하였던 실질적인 권력이 교육부 행정 관료에게 귀결되었던 이전에 비하면, 다자적 구성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기구로 이전되어 행사된다는 점에서 교육 관여자의 참여가 확대되리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3. 역할과 사무

국가교육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국가교육 발전계획 수립, 국가 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조정’으로 크게 3가지로 명시되어 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은 법안 10조를 보면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을 그 내용으로 10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다.

특히, 국가교육과정 고시 권한은 각 교과 영역에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안 등 입법 예고 보도자료(2022.1.12.)를 통하여 개정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은 다른 법안과 달리 2개의 시행령, ①「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②「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후자가 교육과정 제·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단, 법 부칙 4조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되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예외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즉,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고시는 교육부장관이 하되, 사전 심의와 의결은 국가교육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법과 시행령(안)을 종합하였을 때, 교육과정의 제·개정 과정은 ‘발의 → 계획수립 → 개발 → 심의·의결·고시’라는 네 가지 절차를 따른다. 먼저, ‘발의’ 요건을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1조 제1항과 시행령(안) 제6조 제1·2항을 분석하면, 국가교육과정의 제·개정 발의가 되는 경우는

표 16.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기구(국가교육위원회법 및 시행령안 기초 편집)

	구성	기능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 포함 500명 이내, 2년 임기 1회 연임 가능 3/5 이상 일반 국민 공개모집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 과 자문
전문위원회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 포함 5개 이내, 2년 임기 1회 연 임 가능. 각 전문위원회는 21명 이내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에 관한 실무적 자문과 사전검토
특별위원회	상근 위원 포함 21명	긴급·중요 교육 의제 사전검토 및 자문
전문위원	교육·문화·언론·고용·산업·복지·과학기술 등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등 해당 분야 전문가. 2년 임기 1회 연임 가능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문적 조사와 연구
사무처	사무처장(고위공무원단) 1명과 직원	국가교육위원회 행정 사무
교육연구센터	교육 및 관련 분야 연구기관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 로 지정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 수행 지원
국가교육과정 재개정 조직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	국가교육과정개발단
전문위원회 중 가장 많은 45명으로 구성, 국가교육과정 재개정 전반 사전검토 및 자문	교원·학부모·사회인사·비영리전문가·학생, 현장 기반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지원 및 의견수렴 제시	국가교육과정 재개정 계획에 따라 교육연구센터 산하로 운영

출처 : 교육부(2021d, 2021e)와 교육부(2022)의 운영 및 산하기구에 대한 부분을 기초로 편집함.

4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 ① 국가교육발전계획과 함께 10년마다 개정 발의
- ② 국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30일 동
안 20만 명 이상 동의
- ③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제안
- ④ 전국 시·도교육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안

10년 단위 개정이 기본이다. 예외적인 경우가 ②③④
에 해당하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매우
특별한 교육 이슈로 인하여 국민 인터넷 동의 20만 명이
있을 때와 그런 여론이 교육부 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을
움직이는 경우이다. 다른 경우는 선거로 인하여 집권 세
력(대통령)과 교육감 다수가 교체되었을 때라고 볼 수
있다. '10년, 특별 교육 이슈, 선거' 3가지가 교육과정 개
정 발의의 배경이 될 수 있다.

개정이 발의되면 국가교육위원회 21명의 위원 중 과
반수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을 의결한다. 발의
부터 이후 계획수립 → 개발 → 심의·의결·고시 과정에
서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와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
단'의 지속적인 검토·자문·의견수렴이 진행된다.

4. 산하 기구

표 16에서 보듯 국가교육위원회법에서 제시한 운영
기구로는 국민참여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전
문위원, 사무처, 교육연구센터가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기구별로 의견수렴·자문·연구개
발에 대한 기능들을 수행한다.

앞서 언급한 기구들이 국가교육위원회 사무 전반에
대하여 관여한다면, 국가교육과정 재개정에 더 직접적
으로 연관된 조직들로는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 국가
교육과정모니터링단, 국가교육과정개발단이 있다. 국가
교육과정전문위원회는 상근 위원 포함 45명이며,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조사·분석·점검과 개정작업 전 과정에
대하여 사전검토와 자문하는 기능을 한다. 국가교육과
정모니터링단은 시도교육청별, 교과별, 학교급별 교원·
학부모·사회인사·비영리민간단체·학생 등으로 구성되
며, 국가교육과정 재개정 발의·계획수립·개발 시 의견
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법에 따라 지정된 교육연
구센터를 통해 국가교육과정개발단이라는 산하 조직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다. 교육연구센터는 시행령(안)에는
국공립 연구기관, 출연 연구기관, 대학 연구기관, 법인

표 17. 사회과 출신 자격증 과목별 중·고 교원 수

(단위: 명)

		통합사회	일반사회	역사	지리	도덕·윤리
중학		1,283	3,394	4,716	2,121	5,041
고교	일반고	572	4,430	4,168	2,863	2,804
	특수목적고	29	249	232	98	93
	특성화고	174	392	752	125	148
	자율고	18	318	306	217	194
총합		2,058	8,465	9,868	5,207	8,086

출처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1.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서류를 받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고 되어 있어 공개 모집할 가능성이 있다.

5. 대응

교육과정의 권력이 교육부로 집중되었던 부분에서 다원적인 구성의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되며, 산하 조직으로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와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에도 이번 2022 개정 과정에서 진행된 것처럼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 협의회, 현장소통포럼, 핵심 교원연수, 범부처 의견을 수렴한 것과 같은 대국민 여론 확보 과정이 수반될 것이다.

결국 국민의 여론과 요구에 기민하게 움직이지 못하거나, 사회적 효용성을 잃거나, 정치력과 연대력을 갖지 못하는 교과 영역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를 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점에서 교육과정 수립 시 정치적 사회적 역량을 확보한 교과나 영역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 분명하다.

표 17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사회과 교원을 출신 자격증 과목별로 정리한 것이다. 기실 지리 현장 교원의 수는 사회과 4개 영역 중 가장 적다. 지리 자격증 교원의 2/5 정도는 중학교에 존재하지만, 누구도 지리교사라 불러주지 않으며 과목명도 부재하며 사회적 인지도마저 낮은 상황에서 '지리 교사'임을 자랑스럽게 밝히기 어려운 여건이다. 즉 교육과정 활동과 정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교원은 고교 지리 교사로 제한적이며, 실제로 2022 개정 교육과정 대응 과정에서 고교 지리 교사의 참여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지금까지 교육과정 실제 권력이 교육부를 중심으로 일원적이었다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후로는 국회,

대통령, 관료, 교육감, 교원노조, 대학, 시도지사 다차원의 대상이 그것을 갖게 된다. 이는 곧, 교과 영역별 대응도 이전보다 국민 여론을 대상으로 확산하여야 하며 그런 정치적 역량을 갖추도록 모든 지리인들을 추동해야 함을 의미한다.

'의무로써 혁명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혁명은 의무가 아니라 욕망이다. 욕망의 억압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욕망이 발동하여 작동하게 고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혁명이 진정 강력한 힘을 갖게 하는 방법(이진경, 1994)'이라는 말처럼, 단선적·의무적·억압적 활동이 아닌 모든 지리인 본연의 이상을 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창의적인 중지를 모으는 열린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도 있다.

III. 결론

정치적 힘이 약한 지리교육은 교육과정 개정 속에서 그 위상이 낮아질 위기에 있다(박선미, 2018)는 우려와 같이 스스로 정치에 약하다는 되뇌는 지리 교육계에 만연해 있었다.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던 자성예언이 이름 없는 중학교 교실과 위축되어가는 고등학교 교실에서 마주하는 아이들을, 우리로부터 지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지리 교육자들의 염원들을 함의를 통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지속해서 관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요컨대 '총론 교과 배당 기준표(교과 편제표)상 지리 표기, 중학 사회 교과서 지리 기명'에 대하여 세밀한 요구안을 내부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특히, 중학교 과목명·교과서명 부재는 학습자에게 국토 공간을 본질적으로 배우거나 인식할 기회를 약화하여 공간 교육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과정 고시 과정이 ‘교육부에 의한 독점적 권력의 교육과정’이었다면,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은 ‘국민 여론에 기반한 정치의 교육과정’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이에 지리 교육자들은 내외적으로 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참여와 정치 역량을 도모하여야 한다.

매시는 지리학 연구의 목표를 현실정치를 바꾸는 것으로,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의 삶을 개선하는 것으로 분명히 천명해 왔다(Massey, 1994; 정현주 역, 2015). 모든 국민이 딛고 있는 우리 삶을 다루는 지리교육의 소외 현상은 결국 거주 공간을 삶과 괴리시키고 자본과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게 할 것이며, 국토 왜곡과 지역 불균형에 대한 해결을 요원하게 할 것이다. 또한 통일 국토에 대한 대비와 세계 평화에 대한 기여도를 감쇄시킬 것이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절박함을 갖고 지속해서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참여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註

- 1) ‘교육과정 편제표’라고 부르는 것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시안)에서 초·중학교는 ‘시간 배당 기준’으로, 고등학교는 ‘학점 배당 기준’이라는 명칭을 달고 표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이 편제표에는 학교급별 교과(군)·과목명, 이수 기준 시수가 명시되어 있어 국가교육과정 문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교육부, 2021a,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보도 자료
 교육부, 2021b,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의견 수렴 자료
 교육부, 2021c,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시안).
 교육부, 2021d,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부, 2021e,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 자료집.
 교육부, 2021f,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2022개정 교육과정 추진 방향.
 교육부, 2022,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안 등 입법 예

고 보도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1, 교육통계연보.
 권혜정·홍후조, 2021,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법률안의 비교 검토 및 시사점” 교육법학연구, 33(2), 27-54.
 김다원, 2017, “지리교육의 기본개념 분석 연구: 국내의 지리 교육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6(3), 319-337.
 김혜숙·조철기·김병연, 2021, “2022 개정 사회교과군 교육과정 재구조화에 따른 지리교육과정의 개발 방향과 과제,” 2021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동계학술대회자료집, 7-13.
 김혜숙·조철기·김병연, 2022, “2022 개정 사회교과군 교육과정 재구조화에 따른 지리교육과정의 개발 방향과 과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0(1), 77-89.
 류재명·서태열, 1997, “제7차 지리교육과정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 지리·환경교육, 5(2), 1-28.
 박선미, 2005, “제7차 사회과교육과정의 내적 타당성 평가: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3(3), 301-315.
 박선미, 2018, 「한국 지리교육과정의 쟁점과 전망」, 용인: 문음사.
 박철웅, 2012,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서 지리교육의 현재와 문제점,” 한국지리학회지, 1(1), 11-17.
 윤신원, 2021,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지리교사네트워크’의 참여·소통·협력” 2021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동계학술대회자료집, 18-21.
 이진경, 1994, 「철학과 굴뚝청소부」, 서울: 새길.
 이혁규, 2001,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과정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7-9학년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32, 249-292.
 정성훈, 2021, “미래지리교육발전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발전방안” 대한지리학회지, 147, 1-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보도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보도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1,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보도 자료.
 Massey, D., 1994, *Space, Place, and Gender*,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정현주 역, 2015,

박종희

「공간, 장소, 젠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학생평가지원포털 <https://stas.moe.go.kr/>

투고접수일: 2022년 2월 28일

심사완료일: 2022년 3월 12일

게재확정일: 2022년 3월 20일

교신 : 박종희, 34346,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18
번길 22, 회덕중학교(이메일: fainding@korea.kr)

Correspondence : Jonghee Park, 34346, Sintanjin-ro
218beon-gil, Daedeok-gu, Daejeon, Korea, Hoedeok
Middle School (E-mail: fainding@korea.kr)